

2016. 4. 7.

20대 총선 참여연대 분야별 공약 평가 4 - 정치 · 사법 · 반부패 등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검찰 · 선거제도 · 국정원 개혁 · 수사기관의 국민사찰 방지에 대한 공약 보이지 않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약속해

차례

취지 및 개요	3
정치개혁	4
사법개혁	8
반부패 및 공직윤리	12
국정원 개혁 및 테러방지법 폐지	16
표현의 자유와 정보 인권	19

취지 및 개요

- 평가 취지

- 현재 우리 사회는 집권세력의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일방적 정책추진은 극심한 수준임. 더 나아가 권위적 통치 성향은 집회시위를 비롯한 시민의 정치적 자유와 의사표현을 통제하고 억누르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음. 대통령과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역시, 행정부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소선거구 1등 당선자 중심으로 구성되는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권익을 대표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만큼 민의를 대변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 각 정당이 제시하고 있는 주요 공약이 이러한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절한 수준의 해결 방안을 약속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 평가 개요

- 평가 내용 :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4개 정당을 대상으로 함. 여러 공약 가운데 △정치, △사법, △반부패 및 공직윤리, △국정원 개혁, △인권 분야 공약을 평가하였음.
- 평가 기준 : 공약의 방향성, 구체성, 실효성 등을 종합하여 ○, ×, △로 평가하고, 구체적인 평가 이유를 서술하였음.
- 평가는 각 정당이 발표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공약집 내용을 기반으로 함.
 - 새누리당 : 「앞으로 하나로 함께 누리는 미래로」 정책공약집
 -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 잘 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정책공약집
 - 국민의당 : 「어제와 싸우지 않으면 내일은 시작되지 않는다」 정책공약집
 - 정의당 : 「정의로운 대한민국」 정책공약집

정치 개혁

1. 각 정당 공약 총평

- 새누리당 : 여러 정치개혁 의제들 가운데 국회 운영과 관련한 공약만 협소하게 제시하였는데 이마저도 효율성 관점에서만 볼 뿐 국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음. 특히 불공정한 선거제도로 인한 유권자의 권리 침해, 정치적 기득권이 공고해지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약이 전혀 없는 것은 우려스러움. 보다 두텁게 보장되어야 할 유권자 참정권을 확대하는 공약도 전무함. 국회 관련 공약으로는 선진화법 개정, 정책과 도덕성 검증을 구분한 인사청문회 제도 운영,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등을 내세웠는데 이는 다수당의 전횡을 제한하지 못하고 행정부를 견제 감시해야 할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것으로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임.
- 더불어민주당 :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으나 전반적으로 구체성이 떨어지고 추상적임.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연령 하향 조정, 투표시간 연장 등 참정권 확대하는 공약은 긍정적이지만, 정치자금 공개 대상을 협소하게 두어 정치자금의 투명성 보장 측면은 미흡함. 국회의 권한 강화, 민주적인 국회 운영에 대한 공약이 없는 것은 아쉬움.
- 국민의당 :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기본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여러 정치개혁 의제 가운데 일부만 공약으로 제시하여 부족함. 특히 정치 기득권을 재생산하는 현행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공약이 전혀 없고 국회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의 공약이 없어 문제임.
- 정의당 : 선거제도 개혁과 정당 개혁, 정치자금의 투명성,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 강화, 특권 폐지 등 정치개혁 의제를 가장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특히 유권자의 표심이 제대로 국회 의식에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며, 거대 정당 중심의 국회 운영 방식을 바꾸고 ‘법 위에 시행령’을 통제하기 위해 감독권을 강화한 것도 바람직함.

2. 세부 공약 평가

비례대표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			
정당	주요 공약	평가	평가 이유
새누리당	없음	X	
더불어민주당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 도입	△	권역별 비례대표제 공약은 현행 제도보다 사표 방지와 비례성 확대에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임. 그러나 권역별 비례제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의원정수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음. 석패율제는 본래 비례대표제 취지에 반하고 일부 중진에게 유리할 수 있어 정치개혁 방향과 맞지 않음.
국민의당	없음	X	
정의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	연동형 비례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절반의 사표를 줄이고, 현행 선거제도의 핵심 문제인 득표와 의석 간의 불비례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바람직함.

유권자 참정권 등 권리 확대			
정당	주요 공약	평가	평가 이유
새누리당	없음	X	

더불어민주당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투표시간 연장 온라인 선거운동 확대	○	투표권을 확대하기 위해 선거연령을 낮추고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공약은 긍정적. 다만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 의사표현은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온라인 선거운동 확대 공약은 미흡함.
국민의당	유권자 2만명 이상 제안하는 법안을 6개월 내 가부를 결정하는 국민발안국회심의제 도입 지역구 유권자 15% 찬성으로 소환투표에 회부하고, 1/3 이상 투표 및 투표자의 과반 찬성으로 국회의원 파면하는 방안 도입	△	유권자의 입법 요구에 국회가 기간 내 가부를 결정하는 국민발안제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강화하고 국회의 반응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반면, 임기 중 부적절한 의원을 소환하는 국민파면제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그 방안은 적절하지 않음.
정의당	선거일 유급 휴무일로 지정, 공공장소 투표소 확대 등, 사전투표제 확대시행,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교원·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	다양한 투표권 확대 방안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임. 그러나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공약이 없는 것은 아쉬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정당	주요 공약	평가	평가 이유
새누리당	없음	X	
더불어민주당	정당의 고액 특별당비 내역 인터넷 공개	△	고액 당비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인 것은 나름 의미 있으나, 공개 대상이 매우 협소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이라는 제1원칙에는 턱없이 부족함.
국민의당	국고보조금 받는 정당은 중앙선관위가 지정한 회계법인 통해 회계감사 받게 함	○	외부 회계감사를 거치도록 하고 회계보고 공개를 의무화한 공약은 투명성 높이는 차원에서 긍정적임.

	정당·국회의원 회계보고 공개 의무화		
정의당	모든 정치자금 수입·지출 인터넷 상시 공개	○	후원금과 보조금, 당비 등 정치자금 공개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도록 해 유권자 접근도 크게 높여 긍정적임.

의원 특권 폐지 및 국회 기능 강화

정당	주요 공약	평가	평가 이유
새누리당	국회 선진화법 개정, 국회 파행, 의원 구속 등 의정활동 중단기간에 세비 지급 금지, 무차별 의혹 제기가 아니라 정책능력과 도덕성 균형 있게 검증할 수 있도록 청문회제도 개선,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강화, Pay-go 원칙 도입, 허위사실 유포나 막말 명예훼손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제한, 영장실질심사 출석의무화하고 체포동의안 기명표결로 변경하는 등 불체포특권 개선, 의원징계는 윤리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르도록	X	윤리심사를 강화하고 불체포특권 개선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 실천이 중요할 것임. 다만 면책특권 제한은 경우에 따라 소수정당 발언을 제한할 우려 있음. 그 이외의 공약은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치개혁에 역행함. 특히,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의 선진화법 개정,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해 알 권리 침해하는 인사청문회 개선, 국회 입법권한을 침해하는 Pay-go 원칙 도입 공약은 매우 부적절함.
더불어민주당	없음	X	
국민의당	없음	X	
정의당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도록 함, 의원 겸직금지 엄격히 적용, 불체포특권에 대한 정당 책임 강화, 교섭단체 제도 폐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상시화, 행정입법 감독권 강화, 예결특위 상설화	○	시행령 감독권 강화, 국정감·조사 상시 등 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공약이 다수 있어 긍정적임. 의원 세비를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상한선을 두고, 겸직도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약도 특권 폐지를 위한 적절한 공약으로 평가함.

사법(검찰·법원·군사법) 개혁

1. 각 정당 공약 총평

- 새누리당 : 사법개혁 분야 공약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는데, 현재의 검찰과 법원 등이 보여주는 상황에 대한 개선 의지가 전무함. 새누리당은 19대 총선에서 검찰개혁 공약을 제시한 바 있는데, 당시와 비교했을 때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나 중립성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불신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검찰개혁 공약을 하나도 내놓지 않았음. 4년 전에도 법원개혁과 군사법제도 개혁에 대해서 전혀 공약을 내놓지 않은 새누리당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공약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음. 이는 다양성이 결여된 현재의 최고 사법기관 구성을 유지하겠다는 것임. 2015년에 군 지휘관의 재판간섭 가능성을 일부 줄이는 방향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바 있는데, 새누리당은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더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음.
- 더불어민주당 :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 임명의 정치적 중립성 또는 권력개입 차단, 검사의 국가기관 편법과견 원칙적 금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고비처 신설을 제외하고는 구체성이 부족하고 선언적 수준에 그쳤음. 법원개혁과 관련해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으며, 노동법원 도입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임. 군(軍) 사법제도 개혁은 19대 국회 임기 중에 미처 다 개혁하지 못한 사항을 더 추진하기 위한 공약을 제시했음.
- 국민의당 :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사법개혁 분야 공약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음. 현재의 검찰과 법원 등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과 동떨어져 있음.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불신이 높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약, 다양성이 결여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을 바꾸기 위한 공약, 군 지휘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군사법제도를 개혁하려는 공약이 한 가지도 없음.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음.
- 정의당 : 19대 국회에서 도입하지 못한 상설특별검사제도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공약을 제시해 검찰개혁 방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출하였음. 하지만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제청권을 국회로 이관하기 위해 검찰청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두는 것은 국회 기능 강화와 반대로 청와대가 검찰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어 우려됨.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구체적 공약(법관자격 확대)을 제

시한 것은 긍정적인 반면, 헌법재판관 구성시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지명권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헌법 개정사항이라 현실가능성이 낮지만 방향면에 서는 올바른 것임. 군(軍) 사법제도 개혁은 19대 국회 임기 중에 미처 다 개혁하지 못한 사항을 더 추진하기 위한 공약을 제시했음.

2. 세부 공약 평가

검찰개혁			
정당	주요 공약	평가	평가 이유
새누리당	없음	X	
더불어민주당	검찰총장추천위원회 중립성, 독립성 강화	△	필요성은 있으나, 구체적 방안 없이 원론적 수준에 그침.
	검사의 국가기관 편법파견 원칙적 금지	△	필요성은 있으나, 구체적 방안 없이 원론적 수준에 그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	검찰 외에 특별수사기관 설치를 통해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 가능성을 확보하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점에서 긍정적임.
국민의당	없음	X	
정의당	상설특별검사제도 운영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	검찰 외에 특별수사기관 설치를 통해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 가능성을 확보하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점에서 긍정적임.
	검찰청을 법무부에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변경하고, 검찰총장을 국회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도로 변경함.	△	검찰총장 임명과정의 국회 견제력을 확보하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반면, 검찰이 대통령 직속기관이 되어 정치적 종속성이 심화되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법원개혁			
정당	주요 공약	평가	평가 이유
새누리당	없음	X	-
더불어민주당	대법관 여성할당제 도입 등 학계, 시민단체, 재야 법조 출신 대법관 임명을 통한 다양화 도모	○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통해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마련 긍정적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시민단체 등 (법원의) 외부인사 참여 확대	○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대법관후보 제청 가능성 확보라는 점에서 긍정적임.
	노동분쟁 해결을 위한 노동법원 도입 추진	○	노동관련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한 전문법원 설립 필요성 있어 긍정적임.
국민의당	없음	X	
정의당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개편	○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대법관후보 제청 가능성 확보라는 점에서 긍정적임.
	법률가(변호사자격소지)가 아닌 법학교수 등도 대법관·헌법재판관 자격인정, 판검사 출신 헌법재판관 인원 제한	○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점에서 긍정적임.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폐지, 대통령의 지명권 축소	△	헌법을 고쳐야 하는 사항이어서 현실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필요성과 방향면에서 타당함.

군(軍) 사법개혁

정당	주요 공약	평가	평가 이유
새누리당	없음	X	
더불어민주당	관할관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제도 폐지	○	군 지휘관의 재판간섭 차단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점에서 긍정적임.
	평시 군사법원 폐지 또는 항소심 재판 민간법원 담당, 순정군사범죄만 군검찰이 담당	○	군대 바깥의 법관과 검사가 군인 관련 재판과 수사를 맡기 때문에, 재판(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점에서 긍정적임.
국민의당	없음	X	
정의당	관할관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제도 폐지	○	군 지휘관의 재판간섭 차단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점에서 긍정적임.
	평시 군사법원 폐지, 순정군사범죄만 군검찰이 담당	○	군대 바깥의 법관과 검사가 군인 관련 재판과 수사를 맡기 때문에, 재판(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점에서 긍정적임.

반부패 및 공직윤리

1. 각 정당 공약 총평

- 새누리당 : 부정부패를 줄이고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인사 부정청탁자 정보공개라는 공약 제시에만 그침. 현재 대통령의 측근이나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권력 오남용 의혹 사건이 불거져도, 이를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그로 인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나 특검과 같은 독립적인 수사기관 설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공약은 제시하지 않고 있음. 또한 인사혁신처와 각급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반부패 및 공직윤리 감독기능을 어떻게 통합·운영할 것인지 반부패·공직윤리 거버넌스에 대한 고려도 부족함.
- 더불어민주당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및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감독강화라는 측면에서 방향은 긍정적이나 구체적 내용과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공직윤리 공약은 고위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강화, 공무원 징계 강화라는 방향성은 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제시되지 않아 정치적 구호에 그칠 가능성 높음.
- 국민의당 : 부정부패를 줄이고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아무런 공약을 제시하지 않음.
- 정의당 : 이해관계충돌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상설특검 도입 및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고위공직자 취업청탁 근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감독하는데 있어 중요한 개혁과제라는 점에서 방향과 내용 모두 긍정적임. 다만 반부패와 공직윤리 감독을 총괄하는 기구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은 아쉬움.

2. 세부 공약 평가

인사 청탁 근절			
정당	주요 공약	평가	평가 이유
새누리당	인사 관련 부정행위자 정보공개 추진 - 해당기관 및 권익위 홈페이지에 청탁자 정보(이름, 직책) 및 위반 내용 공개 의무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자녀 취업청탁을 제한하는 방향과 취지는 긍정적임. 그러나 청탁자 정보공개 의무화만으로 부정청탁을 예방할 수 있을지 의문임.
더불어민주당	없음	×	
국민의당	없음	×	
정의당	공기업 금수저 취업청탁 근절 및 사학재단 친인척 취업 특혜 제한 - 고위공직자 자녀 취업현황 신고 의무화, 부당채용을 한 공기업 및 민간기업 처벌 강화, 부모 및 친인척 직업과 재산 기재를 금지하는 표준이력서 사용 의무화, 사립학교의 교원임용 채용 교육청 위탁 의무화 및 채용비리 징벌적 조치 강화	△	고위공직자들의 취업청탁과 특혜를 제한하는 취지는 긍정적임. 고위공직자 자녀 취업현황 신고 의무화는 부모에 의한 취업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신고 의무화는 논란이 될 수 있으며, 공기업의 경우 표준이력서 사용이 권장되고 있는 만큼 의무화가 실효성 있을지 의문임.

공직윤리 강화 및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해결

정당	주요 공약	평가	평가 이유
새누리당	없음	X	
더불어민주당	공직윤리 강화 : 금품수수 및 공무원 징계강화, 고위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강화 등	△	고위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강화나 공무원 징계강화는 '강화'라는 방향성만 있지 강화의 수준이나 어떤 내용을 강화할지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짐.
국민의당	없음	X	
정의당	<p>이해관계충돌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화, 이해관계 충돌 심사관 도입, 신고내용 접수 및 조사, 위반 행위 시 수사기관에 사실 통보 <p>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김영란법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에 '직무관련성' 적용 폐지, 부정청탁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기본으로 예외사유적용, 적용대상을 공직자와 민법상 가족으로 확대, 처벌조항 강화 	○	<p>이해관계충돌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은 공직자 부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공직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문제(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방향뿐만 아니라 내용도 타당해 보임.</p> <p>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임.</p>

부패방지 조사(수사) 특별기구 도입

정당	주요 공약	평가	평가 이유
새누리당	없음	X	
더불어민주당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가칭) 설치	○	부정부패를 줄이고 및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어 왔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국가청렴위원회 설치를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긍정적이나, 구체적 내용과 추진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
국민의당	없음	X	
정의당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상설기구로 특별검사를 임명, 운영하는 ‘기구 특검제도’ 도입, 수사대상에 대통령과 친인척, 국무총리 등 장관, 장관급 장성, 대통령비서실 등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국감법에 따른 조사위원회 요청 사건,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요청한 사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고발 사건 등 포함 - 특별검사 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국회와 법조계 중심으로 구성하며, 국회에서 인사청회를 거친 후보자 1인을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관련 법률 제정 - 수사 대상은 특별검사제도의 수사대상이 아닌 입법, 사법, 행정부의 고위 간부(2급 내지 3급 이상) 및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 수사 과정에서 특별검사제도 수사 대상이 연루된 사건은 특별검사에게 사건을 인계함	○	상설특검 도입 및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 이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감독하는데 있어 중요한 개혁과제라는 점에서 방향뿐만 아니라 내용도 타당해 보임.

국정원 개혁 및 테러방지법 폐지

1. 각 정당 공약 총평

- 새누리당 : 과도한 권한 부여로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및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국정원을 통제할 수 있는 감독권을 가진 기관은 존재하지 않음. 이에 국정원 개혁과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해 아무런 공약도 제시하지 않음. 또한 테러방지법 제정을 밀어 붙인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제정 과정에서 제기된 수많은 인권침해 독소조항에 대해 개정 방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음.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국정원에 대한 개혁 의지는 없다고 할 수 있음.
- 더불어민주당 :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국정원 조직을 대북정보 및 해외정보 수집 기관으로 개편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국정원의 권한남용을 막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국정원 개혁 방향은 긍정적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적절함. 그러나 테러를 병자하여 국정원의 권한 강화와 국민감시를 허용하는 테러방지법은 폐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폐지보다는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 적정성을 평가하기 어려움.
- 국민의당 : 국정원 개혁에 대한 공약이 없으며, 테러방지법 또한 폐지가 아닌 국정원의 권한을 일부 축소하는 수준에서 개정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국정원의 권한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 정의당 : 테러방지법 폐지, 국정원 조직개편 방향과 권한남용을 막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국정원 개혁 방향은 긍정적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적절함.

2. 세부 공약 평가

국정원 개혁			
정당	주요 공약	평가	평가 이유
새누리당	없음	X	
더불어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권 및 국내보안 정보 수집권한 폐지, 국정원장 탄핵소추 대상 포함 -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 폐지 - 외부감독기능 강화: 국정원 예산 특례 폐지와 정보위 예산 심의기능 강화, 감사원 감사대상에 국정원 포함, 수사상 진술이나 압수수색 예외 등 국정원 직원 수사 관련 특례 폐지, 국회상임위에 정보기관 감독 업무를 지원할 ‘정보감독지원관실’ 신설 - 장기적으로 국정원 폐지, 대북정보 및 해외 정보 담당하는 ‘통일해외정보원(가칭)으로 개편 	○	국정원 조직을 대북정보 및 해외정보 수집 기관으로 개편하고, 국정원의 권한남용을 막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적절함.
국민의당	없음	X	
정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정보 수집권한 없애고, 해외정보 및 대북 전담조직으로 재편, - 정보 및 보안업무 관련 기획·조정권한 없애고, 국가안전보장회의로 이관, - 국정원 예산 및 결산 등에 대한 통제와 민간인 참여하는 정보감독위원회 신설 	○	국정원 조직을 대북정보 및 해외정보 수집 기관으로 개편하고, 국정원의 권한남용을 막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적절함.

테러방지법 폐지			
정당	주요 공약	평가	평가 이유
새누리당	없음	X	
더불어민주당	테러방지법 개정·보완	△	테러방지법 개정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개정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음.
국민의당	테러방지법 개정 - 테러위험인물 범위 제한,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대테러센터의 집행역할은 국정원 이외의 조직이 담당, 국정원의 금융거래 지급정지 요청권 삭제, 국정원의 대테러조사권을 조사참여권,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척권을 동향파악권으로 축소	△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소에 대한 의식이 부족함. 테러방지법 개정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국정원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 이용정보,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와 위치정보 등 무차별 수집권한에 대한 개정 의견이 없음. 개정안은 국정원의 권한을 일부 축소하는 수준에 그쳐 인권침해 및 기본권 훼손 가능성 높음.
정의당	테러방지법 폐지 - 테러방지법 폐지 법률(안) 발의 및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	테러방지법 폐지 입장을 명확히 제시

표현의 자유와 정보 인권

1. 각 정당 공약 총평

- 새누리당 :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온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공약이 없음. 권력비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약도 없음. 또한, 시민의 수면권 평온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광장, 공원에서의 장시간 천막, 플래카드설치와 철야 집회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공약은 이 시간대에는 오히려 광장과 공원에 인적이 드물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세월호참사추모집회 등과 같이 광장, 공원 등에서의 장기 철야 집회를 금지하기 위한 꼼수로 보임. 전반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과 진단, 이를 토대로 한 정책고민이 없어 보임.
- 더불어민주당 :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제도 개선을 위한 영장주의 도입, 통지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은 적절해 보임.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다 확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개정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국민의당 : 최근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무단 수집에 대한 공약이 없음. 또한,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등이 사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민주사회의 기본권으로서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공약이 보이지 않음. 권력비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제안도 보이지 않음.
- 정의당 : 다른 정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 방지, 권력비판 표현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공약들이 구체적이고 현실 진단과 이를 바탕으로 한 세세한 공약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완성도가 높음.

2. 개별 공약 평가

수사기관에 의한 불법 사찰 방지			
정당	주요 공약	평가	평가 이유
새누리당	없음	X	
더불어민주당	공권력의 불법사찰, 개인정보수집 근절 위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 통신제한조치 요건 강화, 긴급통신제한조치 남용방지, 통신자료제공에 영장주의 도입 등	○	수사기관에 의한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으로 국민사찰 우려가 높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 적절하게 관련 법개정 등 구체적 실현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음.
국민의당	없음	X	
정의당	<p>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 방지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 가입자 정보 수집에 영장주의 도입 등 허가요건 강화, 통지 의무화 및 대상 확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제한조치(감청) 관련 피내사자 등 대상 제한, 영장주의 도입 및 긴급통신제한 <p>조치 사후영장 의무화, 기간 연장 횟수 제한, 통지 의무 강화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 범죄혐의와 무관한 피의자 및 제3자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 도입 등 	○	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와 방향이 긍정적이고 구체적 방안도 제시됨.

권력 비판 표현의 자유 보장			
정당	주요 공약	평가	평가 이유
새누리당	없음	X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등의 인터넷실명제 폐지 및 임시조치 제도 개선	○	익명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 방향은 긍정적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도 적절해 보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개편 및 심의규정 대폭 수정 : 정치적 행정심의 불허 및 명예훼손죄 남용 방지	○	정치적 행정심을 막아 권력비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취지, 방향은 적절해 보이며 개선 방안도 긍정적임.
	방송의 공정성 확보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확보 등	○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취지에 맞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방향도 적절해 보임.
국민의당	없음	X	
정의당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완전한 민간 독립 기구화 : 정치심의, 편파심의, 공안심의 논란 불러일으키며 제작·편성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기구에 의한 검열 폐지 - 방송심의규정 개선 : 기계적 균형에 치우칠 수 있는 “양적 균형성”(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 2항)자율규제로 전환 등	○	행정심의, 편파심으로 방송 및 통신의 권력비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 맞게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됨.
	여론형성 방해를 위해 악용되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진실적시명예훼손죄 및 형법 모욕죄 폐지	○	취지와 방안 모두 긍정적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

정당	주요 공약	평가	평가 이유
새누리당	광장, 공원 등에서 천막이나 플래카드 장기간 설치, 철야집회 금지 : 0시~오전 6시 집회 전면금지	X	심야시간대의 시민의 수면권, 평온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맞지 않게 심야시간대에 인적이 드문 광장, 공원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장소에서의 장기간, 철야 집회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폐기해야 할 공약
더불어민주당	집회시위 신고를 경찰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변경, 집회시위 금지 장소 축소, 경찰의 살수차 운영 제한적 허용 등	○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와 방향에 맞게 구체적 방안도 제시하고 있음.
국민의당	없음	X	
정의당	집시법의 절대적 집회금지구역 폐지, 주요도시 주요도로 지정 축소	○	집회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인 장소선택을 예외 없이 제한하는 현행 집시법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와 방안 모두 긍정적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참여연대 분야별 공약 평가 4 - 정치·사법·반부패 등

발행일 2016. 4. 7.

발행처 참여연대 시민감시1팀·시민감시2팀

담당 이선미 팀장·이은미 팀장 02-725-7104

Copyright ©참여연대, 2016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주소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